

野, 신재민 연일 비방하는 손혜원에 “인신공격” 맹공

“자신의 지위 남용하여 인격살인 하고 있다”

야당은 5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시무관을 비방한 손혜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인신공격”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 의원은 32세 청년 공무원의 정의를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인신공격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고발자인 고영태를 향해서 의인 중의 인이리며 온갖 미사여구를 불여가며 치켜세우던 사례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어 “정부여당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아 앞으로 제2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뻔뻔한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가고 있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손 의원을 ‘꼰대’라고 비하하면서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신공격으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홍균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2세 전 사무관이 증거까지 들이밀며 부정을 고(告)해도 믿지를 않으니, 일반 청년 대중들의 울부짖음은 얼마나 가비이 여길지도 짐작이 간다”면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방 글이 논란이 되자 허겁지겁 이를 삭제하고 변명하는 모습은 손 의원만의 경거망동(輕舉妄動)의 정수”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손 의원이 쏟아 붓는 인신공격은 정부

에 흡집이 날까 걱정하는 괴임 충정은 알겠으나, 작은 의혹 제기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양 나서는 인신 비하와 매도는 인권을 소중히 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흡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자 일 뿐 인신공격의 대상도 정쟁의 도구도 아니다. 국회가 제기된 의혹을 바로 잡지 않고 샛길에서 내부 제보자를 두고 인신공격과 정쟁에 만 빠진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은 큰 길 험악한데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스북에 ‘이미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혁신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 짓”이다’는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글을 공유하며 연일 신 전 사무관을 향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유시민 알릴레오’ 대홍행… 조회수 140만 유튜브 1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 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첫 방송 된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좋아요 16만건, 유튜브·팟빵 인기동영상 1위

노무현재단 구독자 39만8천명…40만명 육박

‘유시민의 알릴레오’ 1회는 6 일 오전 10시 기준 141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좋아요는 16만 건에 달했으며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다. 팟캐스트 순위제공 사이트인 ‘팟빵’에서도 1

위에 랭크됐다. 이 방송이 올리온 ‘사립’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도 방송된 이후 현재 구독자 수가 39만

874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첫 방송에서 “우리 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정책의 뿌리, 배경, 핵심정보를 잘 찾아가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뉴시스

방송 진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첫 초대 손님으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해 남북·북미 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풀라’를 의식한 듯 “항간에는 어떤 보수 유튜브 방송과 우리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한다”면서 “저희는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도 페이스 북에 “좌파 유튜버들은 한 달 내로 소재가 고갈될 것”이라며 “국정홍보 방송은 원래 그렇다”고 유 이사장 방송을 견제했다. 또 “구독자 수야 좌파들은 잘 뭉치니까 단숨에 올라가겠지만, 접속시간, 접속자 수는 점점 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며 “원고 재미있을 거다. 1대 100의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뉴시스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무산에 野 일제히 비판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 우롱…사죄해야” vs “정치공세”



광화문대통령사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홍준 전 문화체청장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야 4당이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무능은 팩트, 위선은 일상, 거짓말은 현재 진행형인 문정부”라며 “너 이상 즉흥적인 포퓰리즘에 근거한 악속은 남발하지 마라 준비 안 된 문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악속 과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과 상시적 소통은 고사하고 국민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악속 과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과 상시적 소통은 고사하고 국민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정당은 청와대 집무실을 확장하거나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다”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길 대통령과 소주 한 잔을 상상했던 국민들은 면밀한 검토 없이 제시된 ‘공약’(空約)에 속이 쓰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비판 국민들 아쉬움과 실망감이 큰 민족, 더 큰 소통 강화로 국민들의 쓰린 마음을 달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승현 상근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광화문 대통령 공약의 취지는 ‘국민과의 소통’과 ‘청와대 개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점보다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모든 이슈를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야당에서 나리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적어도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정책을 고집부리거나 꼼수로 추진했던 야당,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야당으로부터 비판당할 일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앞서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지난 4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당 “국정농단 기소 2년 넘어…사법부 직무유기”

“대부분 핵심 피의자들 구치소에서 풀려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협안브리핑을 통해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김기춘 전 실장 정도를 제외하면 핵심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11월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해당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고하도록 했다”며 “또 공소 제기일부터 최종심까지 7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사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만큼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본인과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